

KT 노동조합

현 장 과 함 께 하 는 노 동 조 합 건 설

10 04th

발행인 : 김구현 편집인 : 허 진
 주소 : 463-71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대표전화 : 031-727-4820(교육선전실 4850)
 팩스 : 031-727-4815
 홈페이지 : www.kttu.or.kr
 디자인 : 디자인 여백(02-2279-9631)

2009년 5월 4일(월)

민주노총

5·1 노동절 맞아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민주노총(위원장: 임성규)은 5월 1일(금) 오후 3시 여의도공원에서 119회 세계 노동절을 맞아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절 집회를 단독으로 주관하던 관례를 깨고, 500여 시민·사회 단체와 공동으로 행사를 치렀다. KT노동조합 중앙집행위원회 및 수도권·강원·본산지방본부 조합간부들은 여의도공원 행사에 참석했으며, 그 외 지방본부는 지역별 행사에 참여했다(3면에 계속).

노동부와 1년만의 대화서 평행선 달려

한편, 민주노총 위원장과 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3월 이후 1년 1개월 만에 대화에 나섰다. 임성규 민주노총 신임위원장은 지난 4월 13일(월) 오후 정무위원회에서 이영희 노동부장관을 만나 비정규직법 개정과 최저임금법 등 노동현안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이번 만남은 1년여 만의 자리였지만 대화 분위기는 신동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고,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의 입장 차만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성규 위원장은 이영희 장관에게 “노동부는 노동자를 위한 부서여야 하는데 비정규직 등을 개악만 하고 있어 매우 서운하다”며 “장관은 비정규직법이 비정규직을 해고당하지 않도록 한다고 지금 보고를 잘못 받고 있는 것”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그러자 이 장관은 “대화 없이 현 정권과 정부가 반노동적이라고 일반적으로 규탄하는 것이 유감스럽다”고 맞받았다.

특히 노동 현안과 관련해서는 노정이 평행선을 달려 이후 노정 관계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민주노총과 정부는 앞으로 각종 현안에 대한 ‘협의 틀’을 갖기로 합의했으나, 전망은 어두운 편이다. 주요 현안에 대한 노정간의 입장차이가 확인한데다 민주노총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IT연맹

노동자대회 총결집 결의



IT연맹은(위원장:박흥식)은 4월 14일(화) 제3차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고, 5월 1일(금) 전국노동자대회를 위해 가맹노조 조합원 조직화에 힘쓰기로 결의했다. 연맹은 이번 노동자대회에 참여조직을 수도권, 전북, 제주 등 7개 지역으로 나누고 지역 노동자대회에 조합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중집위에서는 후지쯔노동조합 가맹 인증증 전달 및 4월 민주노총 임시대회 결과, UNI-KLC 대표자회의의 결과, 경기도교육감 선거관련 보고, 단위조직 일정공유 등이 이어졌다.

전국 142개 분회 지부로 승격 개정된 규정에 따라 4월 10일자로 승인

노동조합은 4월 10일(금)자로 전국 142개 분회를 지부로 승격했다. 지부승격은 지난 2일(목) 개최한 노동조합 1차 중앙위원회의의 규정개정 의결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지부설치 기준은 조합원 수에 따른 기준을 삭제하고 ‘동일건물 내, 독립기판 단위로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승격된 지부는 아래와 같다.

- △ **강북지방본부(10개)**
 흥제, 방학, 월곡, 문산, 능곡, 덕양, 가평, 양평, 퇴계원, 전곡
- △ **강남지방본부(13개)**
 과천, 수서, 북수원, 남양, 서수원, 수지, 영통, 신갈, 안중, 오산, 모란, 하남, 여주

- △ **서부지방본부(14개)**
 가양, 김포공항, 만수, 주안, 석남, 인천공항, 강화, 항동, 동부천, 호계, 동안양, 동안산, 시화, 공단
- △ **부산지방본부(27개)**
 미남, 장림, 덕포, 가야, 기장, 수영, 양정, 성남, 서울산, 서창원, 함안, 창녕, 장승포, 진영, 밀양, 사천, 삼천포, 남해, 하동, 함천, 거창, 은산, 언양, 의령, 고성, 산청, 함양
- △ **대구지방본부(20개)**
 동촌, 영천, 하양, 고산, 범물, 상동, 영덕, 울진, 동구미, 구미공단, 문경, 예천, 군위, 성주, 고령, 달성, 청도, 의성, 청송, 봉화
- △ **본산지방본부(5개)**
 부산고객센터, 충청고객센터, 호남고객센터,

- 국제해저센터, 위성관제센터
- △ **전남지방본부(15개)**
 본촌, 동광주, 화순, 나주, 송정, 강진, 완도, 북순천, 동순천, 북여수, 고흥, 무안, 영암, 장흥, 진도
- △ **전북지방본부(4개)**
 팔복, 부안, 고창, 사업지원센터
- △ **충남지방본부(13개)**
 동대전, 신탄진, 구봉, 남대전, 북대전, 조치원, 성환, 예산, 태안, 부여, 서천, 금산, 청양
- △ **충북지방본부(7개)**
 상당, 진천, 가경, 영동, 금양, 옥천, 사업지원센터
- △ **강원지방본부(14개)**
 흥천, 철원, 삼척, 태백, 횡성, 영월, 양구, 양양, 고성, 정선, 인제, 화천, 평창, 사업지원센터

제1차 중앙집행위원회의 개최 총 10인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



▲ 2009년도 제1차 중앙집행위원회의가 4월 2일(목) 열렸다.

노동조합은 4월 2일(목) 오후 1시 본사 5층 회의실에서 1차 중앙집행위원회의를 열어 10명의 중앙선거관리위원을 인준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명단은 다음과 같다.

- △ 구자철 강북/중앙지부

- △ 유광현 강남/수원지부
- △ 장화영 서부/경기시흥지부
- △ 김상훈 부산/미남지부
- △ 박추서 대구/대구NSC지부
- △ 양해용 본사/국제위성센터지부
- △ 유호열 전남/호남넷운용단지부
- △ 유재권 전북/마케팅단지부
- △ 장원호 충남/성환지부
- △ 박한수 강원/동해지부

제1차 중앙위원회의 개최 전국대의원 선출방법 등 규정개정안 심의·의결



▲ 노동조합은 중앙위원회의를 통해 규정개정을 심의·의결했다.

노동조합은 4월 2일(목) 오후 2시 본사 5층 회의실에서 1차 중앙위원회의를 열고 규정 개정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개정사항은 ▲전국대의원 선출 방법 ▲분회의 지부 승격 ▲지부 설치 기준 ▲보결선거 규정 보완 ▲여비규정 개정 등이다. 전국대의원을 지방본부대의원 중

에서 선출키로 한 규약에 따라 대의원 선거를 정기지방본부대의원대회와 병행해 실시하기로 했다. 분회의 지부 승격과 관련해서는 ‘2009년도 분회를 지부로 승격함에 따른 지부장선거는 2008년도 각급 대표선거 시 당선된 분회장이 지부승격 승계된다’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신설·사고지부 지부장 49인 선출

노동조합은 4월 23일(목) 신설 및 사고지부 대표자 선출 선거를 실시해 신임 지부장을 선출했다. 투표는 전체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나, 부산지방본부 금곡지부의 경우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어 27일(월) 재투표를 실시했다. 신임 지부장으로 당선된 총 49인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 △ **강북지방본부**
 경기북부마케팅단지부(이원웅), 강북네트워킹운용단지부(이광수), 서울북부법인사업단지부(김준현), 경기북부법인사업단지부(신경재), 의정부지부(류재욱)
- △ **강남지방본부**
 서울남부마케팅단지부(변광석), 동탄지부(유기수), 강남네트워킹운용단지부(김성만), 경기남부법인사업단지부(임병태), 서울남부법인사업단지부(김인재), 팽택지부(이군성)
- △ **서부지방본부**
 인천법인사업단지부(조일환), 백령지부(심홍신)
- △ **부산지방본부**
 울산마케팅단지부(예경원), 경남마케팅단지부(김상찬), 금곡지부(허일웅), 부산네트워킹운용단지부(이상업), 부산법인사업단지부(김정백), 경남법인사업단지부(박영웅), 울산법인사업단지부(임용식), 부산마케팅단지부(김호겸)
- △ **대구지방본부**
 경북마케팅단지부(이정진), 울릉지부(김재환), 영양지부(권오웅), 대구네트워킹운용단지부(차용태), 대구법인사업단지부(변우영), 경북법인사업단지부(신용승), 성서지부(이재용), 북포항지부(이원중)
- △ **본산지방본부**
 미디어운송센터지부(허종욱), WIBRO운송센터지부(윤운현), 고객센터지부(최종국), IDC운송센터지부(김철환)
- △ **전남지방본부**
 담양지부(정상준), 영광지부(김종범), 호남네트워킹운용단지부(류춘웅), 광주법인사업단지부(오진모), 전남법인사업단지부(한규창)
- △ **전북지방본부**
 무주지부(변준호), 전북법인사업단지부(신환국)
- △ **충남지방본부**
 충남마케팅단지부(장석배), 계룡지부(박승웅), 중부네트워킹운용단지부(박준복), 대전법인사업단지부(문홍배), 충남법인사업단지부(인명준)
- △ **충북지방본부**
 증평지부(장병기), 충북법인사업단지부(차용남)
- △ **강원지방본부**
 강원마케팅단지부(오성근), 강원법인사업단지부(이혁중)

노동조합, 4월 17일부터 인사보수제도개선협의회 가동 KT-KTF 통합에 앞서 임금체계 등 각종제도에 대한 이해 필요



▲ 노동조합은 KT와 KTF의 임금 및 각종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인사보수제도개선협의회’를 가동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6월 1일(월) KTF와의 통합호가 출범하면서 KT와 KTF의 임금체계를 비롯한 각종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단계교섭에 앞서, 지난 4월 17일부터 ‘인사보수제도개선협의회(이하 개선협의회)’를 가동하고 있다. 노동조합과 회사는 4월 16일(목) 오후 2시 16층 회의실에서 첫 개선협의회를 개최했다. 노동조합은 이날 개선협의회를 통해 인사·보수·복지제도 등 개선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 4월 7일(화)부터 4일간 실시한 노사합동 실태조사 결과를 전달하며 위반사례를 강력하게 항의했다.

‘노사합동 실태조사결과’ 시정 요구
 노사합동 북부실태조사는 현장조합원들의 고충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김구현 위원장이 3월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지시한 바 있다. 이날 개선협의회에서 거론된 노사합동 실태조사 결과는 △야간 비상출동 근무시간 6시간 초과 근무 후 숙휴 미처 및 휴일수당 미지급 △간급출동비 미지급 △강제적인 대체(회망)휴일 부여 △변형근로제 운영 △영양관측비 규제 △RM요원 여비 오지급 △근무시간 외 자택대기 △무작위 비용 절감 사례 등이다. 노동조합은 이에 대해 사측의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이러 양측은 노사간의 신의성실 원칙을 위배하는 여러 사례를 먼저 시정 조치한 후, 인사 및 보수제도에 대해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 이날 오후 2시 30분경 개선협의회를 정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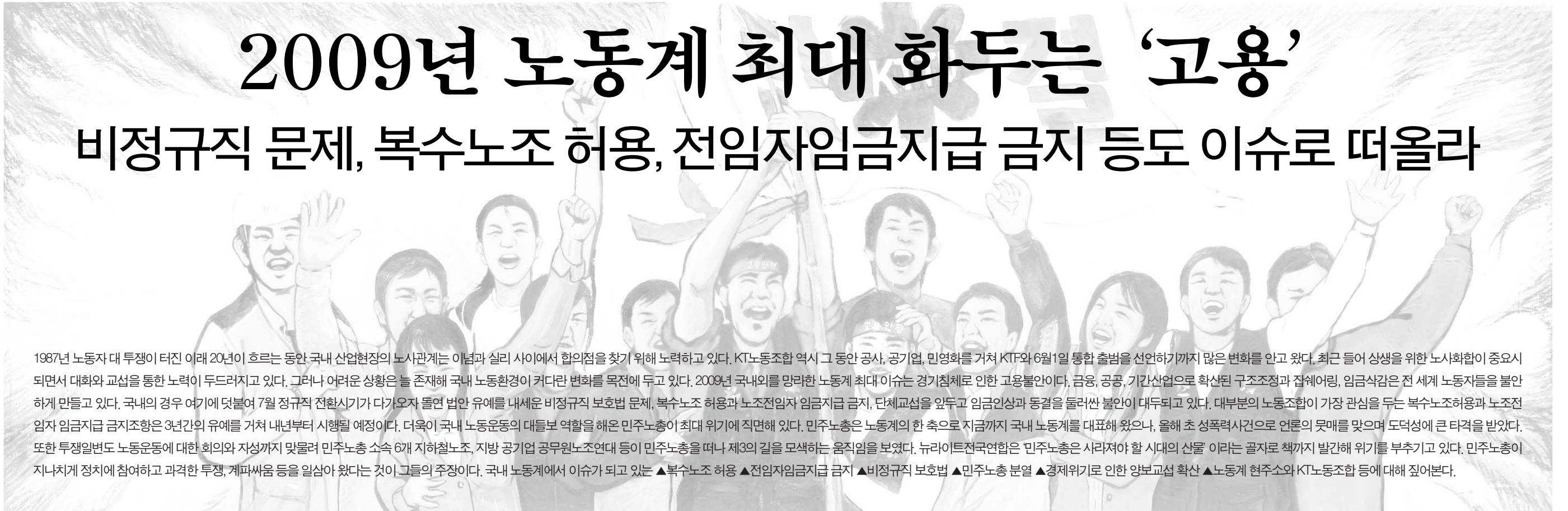
북부실태 위반사례 시정조치 확인
 노동조합과 사측은 4월 20일(월) 오후 2시 본사 16층 회의실에서 개선협의회를 속개했다. 노동조합은 먼저 사측으로부터 노사합동 북부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받았다. 노동조합은 지난 16일(목) 첫 회의에서 북부실태 위반사례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며 선(先) 시정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사측은 위반사례에 대해 시정할 것을 문서로 지시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문건에 따르면, 6시간 이상 야간 긴급출동시 익일 북부표상을 ‘숙휴’ 처리하고, 월3회 이상 일근자 석근자 교대근무자로 근무형태를 변경키로 했다. 또한 근무시간의 개별 자택대기 지정을 금하고, 연차휴가는 월별 균등 분할 시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RM직원 여비규정을 준수해 지급하고, 영입 관측활동비를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문건에는 이 밖에도 변형근로, 회망휴일 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 사항을 준수하여 시행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측 대표위원 서유열 GSS 부문장은 “노사신뢰관계를 위해 북부실태 위반사례를 시정하고 원상

복귀하도록 지시했다”며 “앞으로도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할 계획이며 만약 재발한다면 기관장 문책 등 인사조치를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KT-KTF 인사보수복지제도 차이점 검토
 노사는 KT-KTF 합병에 따른 양사의 인사 및 보수, 복지분야 차이점에 대해 검토했으나 심도 있는 논의는 진행하지 못했다. 노동조합은 “열 페이지도 안 되는 자료를 두고 KT와 KTF의 인사, 보수, 복지제도 전체를 협의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자료 보강을 요구했다. 또한 “자료를 보면 KT 복지제도는 전통적이고 KTF 복지제도는 현대적이라고 표현했다”며 “양사 제도의 장단점을 균형감 있게 정리하지 않고 마치 KT제도는 문제가 있고 KTF제도는 좋은 것처럼 정리했다”며 강하게 항의했다. 특히 사측이 문제점으로 지적한 연령대별 복지수혜 불균형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은 “40~50대가 많은 KT와 상대적으로 젊은 조합원이 많은 KTF와의 인력구조의 차이를 감안하지 않고 이를 무작정 잘못이니 문제점이니라고 표현한 것은 잘못된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노사는 이날 오후 3시 50분경 간사간 협의를 거쳐 차기 회의를 적절한 시점에 개최하기로 정리하고 정회했다. 노동조합은 차후 인사보수개선협의회를 통해 임금 및 보수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노동조합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2009년 노동계 최대 화두는 '고용'

비정규직 문제, 복수노조 허용, 전임자임금지금 금지 등도 이슈로 떠올라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이 터진 이래 20년이 흐르는 동안 국내 산업현장의 노사관계는 이념과 실리 사이에서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KT노동조합 역시 그 동안 공사, 공기업, 민영화를 거쳐 KT와 6월1일 통합 출범을 선언하기까지 많은 변화를 안고 왔다. 최근 들어 상생을 위한 노사협력이 중요시 되면서 대화와 교섭을 통한 노력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은 늘 존재해 국내 노동환경이 커다란 변화를 목전에 두고 있다. 2009년 국내외를 망라한 노동계 최대 이슈는 경기침체로 인한 고용불안이다. 금융, 공공, 기간산업으로 확산된 구조조정과 잡채어링, 임금삭감은 전 세계 노동자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국내의 경우 여기에 덧붙여 7월 정규직 전환시기가 다가오자 불연 위반 유예를 내세운 비정규직 보호법 문제,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단체교섭을 앞두고 임금인상과 동결을 둘러싼 불안이 대두되고 있다. 대부분의 노동조합이 가장 관심을 두는 복수노조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은 3년간의 유예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더욱이 국내 노동운동의 대변부 역할을 해온 민주노총이 최대 위기에 직면해 있다. 민주노총은 노동계의 한 축으로 지금까지 국내 노동계를 대표해 왔으나, 올해 초 성폭력사건으로 언론의 뒤통수를 맞으며 도덕성에 큰 타격을 받았다. 또한 투쟁일변도 노동운동에 대한 회의와 자성까지 맞물려 민주노총 소속 6개 지하철노조, 지방 공기업 공무원노조연대 등이 민주노총을 떠나 제3의 길을 모색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뉴라이프전국연합은 민주노총은 사라져야 할 시대의 산물이라는 골자로 책자식 발간회 위기를 부추기고 있다. 민주노총이 지나치게 정치에 참여하고 과격한 투쟁, 개파싸움 등을 일삼아 왔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국내 노동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복수노조 허용 ▲전임자임금지금 금지 ▲비정규직 보호법 ▲민주노총 분열 ▲경제위기로 인한 양보교섭 확산 ▲노동계 현주소와 KT노동조합 등에 대해 짚어본다.

■ 2010년 복수노조 허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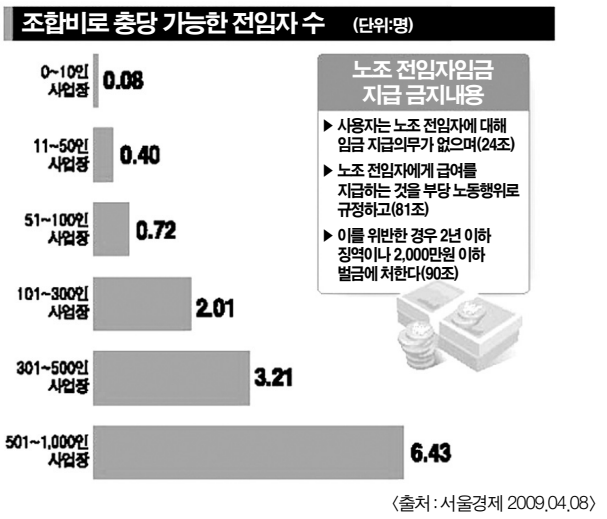
내년부터 복수노조가 허용될 전망이다. 경영진과 노동조합은 복수노조의 여러 유형과 원인을 점검하고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 해야 한다. 복수노조를 앞두고 노동조합은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전문성을 갖춘 운영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반면 우려되는 점은 복수노조가 정부와 사측에 의해 악용될 우려가 있어 어용노조가 만들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본래 복수노조 도입의 취지는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국제노동기구(ILO)도 노동자 스스로 결집하여 독립적 단일노조를 구성하고 있다 해도, 법률로 이를 제도화해 단일 중앙조직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이는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원칙을 차단하기 때문이다.

최근 노동부는 한나라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정책사안인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관련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6월 3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이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다. 노동부는 내년부터 복수노조가 허용될 경우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지 않으면 사측이 회사 내 각각의 노조와 임금 등 단체협상을 벌여야 한다며, 교섭창구 단일화 및 단체교섭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한 관련법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거론되는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은 배타적 과반수제(선거에서 이기는 노조가 교섭권을 갖는 방식), 비례대표제(소속 조합원의 수에 비례해 교섭대표를 뽑는 방식) 등이다.

■ 2010년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근래 들어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대한 노동부의 강경 발언이 부쩍 늘고 있다. 정부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노동법 조항을 더 이상 유예하지 않고 내년에 반드시 시행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노동계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과 동법 제81조 제4호(전임자 급여 지급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간주)가 1996년 12월 26일 새벽 날치기로 통과된 노동법 개정에 의해 입법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들 법 조항은 노사간 자율적인 교섭을 통해 결정해야 하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를 법으로 금지했다는 입법론적 문제를 안고 탄생했다는 것이다.

현재 노사정위원회는 내년으로 예정된 법 시행을 앞두고 노조의 재정지원 방안 등을 연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노조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대책이라기보다는 노조의 자구노력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연구원 이 내용은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340개 노조의 유급노조 전임자는 1,199명으로 이들의 연간 임금은 518억 원인 반면, 조합비는 467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누가 봐도 조합비로 전임자 임금을 지불할 수 없는 구조다. 때문에 노동계의 우려는 노조활동 위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이에 산별노조 등 초기업 단위 노조로의 전환을 대안으로 거론하고 있다. 노조의 조직형태를 주류인 기업별 단위에서 산별법 또는 지역별로 확대해 여러 개의 단위사업장이 공동으로 전임자를 돕으로써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법 조항으로 강제하기 보다는 노사자율에 맡기는 것이 낫다는 의견을 분명히 밝혀 왔다. 비유 때문에 당장 전임자 수를 줄이는 것은 3만 조합원을 보유한 KT 같은 전국 사업장에서도 쉽지 않은 일이다. 중소기업 사정

은 볼 보듯 뻔하다. 대부분의 대기업이 2~3천명 규모이고, 중소기업은 조합원수가 많아 3백명에 달하기 때문에 조합비로는 단 몇 사람 임금을 감당할 수 없다는 계산이 나온다. ILO도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는 입법적 관여사항이 아니므로 현행 노조법 상의 관련규정을 폐지할 것을 수 차례 권고한 바 있다.

■ 비정규직 외면하는 '비정규직 보호법'

오는 7월이면 비정규직 보호법을 시행한 지 만 2년이 된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크게 늘어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 제정된 비정규직 보호법은 계약직 근로자로 2년 이상 일하면 사용자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취지대로 비정규직이 2년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사례는 드물고, 오히려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있고 계약만료로 이유로 해고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게다가 노동부는 2년으로 규정돼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제한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여서 비정규직 고착화에 불을 지피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4월 국회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당정간 이견이 조율되지 않고 있는 데다 4.29 재선거와 맞물리면서 충분히 협의할 시간조차 없고 노동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밀어붙일 수 있는 정치적 여건도 안 되기 때문이다.

최근 한나라당이 제시한 '비정규직법 시행 유보안'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태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한나라당은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정부안 대신, '고용기간 2년 제한' 조항적용을 4년 유예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오는 7월부터 고용기간 2년 제한이 적용되면 기간이 만료된 90만 명의 비정규직이 정규직 전환 또는 실직돼야 하는 부담이 있는 만큼, 법 적용을 아예 유예하자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최근 비정규직 문제의 정면돌파를 위해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별도로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뜻을 밝혔다. 민주노총이 마련한 법안에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악용의 소지가 큰 '기간제한'을 '사유제한' 방식으로 바꾸고 이를 근로기준법에 명시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사유제한이란 임신이나 육아휴직 등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을 뜻한다. 민주노총은 빠른 시일 내에 법안 내용을 확정해 발표하고, 민주노동당을 통해 의원입법 형태로 입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Table comparing labor laws: <비정규직법 개정에 대한 입장 비교>. Columns: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총, 노동부. Rows: 기간 제한, 파견, 간접 고용 규제, 차별 시정 제도.

■ 점점 대두되는 민주노총 위기

민주노총이 인건지하철노조 등 공공부문 노조의 잇단 탈퇴로 1995년 출범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성폭력 파문에 이은 단위노조 이탈, 여기에다 내년 6월부터 도입되는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의 악재까지 겹쳐 민주노총 내부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4월 중순 노동계에 따르면 최근 들어 민주노총을 이탈하는 단위노조가 늘면서 조합원 수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민주노총 출범 첫해인 1995년 41만명인 조합원 수는 1997년 5월 52만명, 2003년 62만명으로 매년 증가하다가 2006년 75만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2007년 66만명, 2008년 65만명으로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민주노총 노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탈퇴 노조들은 조합원의 권익과는 동떨어진 정치투쟁 위주의 노동운동 대신 실리주의 노선을 선택하겠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대다수의 노동조합에서는 민주노총 탈퇴는 선불리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상당수 단체인 민주노총의 정부와 재계에 대한 견제 역할, 연대의 힘 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민주노총의 위기, 복수노조 허용과 맞물려 제3노총 설립 등 새로운 노동운동 세력이 등장하고 있다. 이 조직은 양대 노총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중간노조와 일부 공공기관 노조를 중심으로 기존의 제3노총 추진 세력, 뉴라이프 등 보수노선을 표방하는 노동조합 등이다.

■ 경제위기로 인한 양보교섭 확산

전 세계적인 경제불황은 노사관계의 변화를 조래하고 있다. 노조와 경영진이 한발씩 서로 물러나 분위기를 막아보자는 '양보교섭'이 노사협상의 새로운 형태로 양 노조가 있다. 전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 '고용안정'을 전제로 임금동결과 잡채어링, 무과업 선언 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지난 3월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2월 29일까지 국내 노사 양보교섭, 협력선언은 모두 42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45건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었다. 임금반납, 삭감, 무교섭 등 사실상 '무과업' 선언이 323건에 달해 전체의 76.5%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동기 30건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단체교섭을 앞두고 수세에 몰린 노동계의 소극적 방어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크다. 그간 많은 부분에서 고용불안을 강요 받아 온 노동자의 권리가 각 기업의 상황과는 별개로 경제위기로 인한 미명 하에 전연일률적으로 또다시 희생에 처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다. 이는 노동자들의 자기전파를 위해서도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순이익이 상당할때도 불구하고 근로조건이나 복지에 대한 처우가 우선순위에 배치된다면 양보교섭 여하는 상당히 위험한 추세임이 분명하다.

■ 국내 노동계 현주소와 KT노동조합

경제 위기로 인한 고용불안이 대두되면서 노동계가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다. 여기에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비정규직 보호법,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임금지금 금지를 앞두고 노동계의 고민은 깊어가고 있다.

노동계가 휘청거릴수록 단위 노동조합은 물론, 조합원들의 불안도 높아만 간다. 중요한 것은 단결력·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으로 대표되는 노동3권은, 노동자의 권익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 생활권이라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만큼, 조합원의 불안을 잠식할 수 있는 추진력과 의지로 조합원들의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

결국 위기일수록 노동조합은 신뢰를 회복하고 전문성을 갖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노동조합은 행동하고, 공부하며, 투명한 집행부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시대가 변하면서 노동조합에도 보다 전문적인 운영방법과 성과가 요구되고 있다. 과거 되풀이되던 노동조합의 투쟁일변도 정책이나 대안 없는 구호는 더 이상 조합원들에게 설득력을 얻기 힘들다.

통합KT와의 출범과 단체교섭을 앞둔 KT노동조합의 고민도 크게 다르지 않다. 10대 집행부 조합원들은 김구현 위원장의 뜻에 따라 고용안정을 최 우선으로 여기고 현장과 함께하는 노동조합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서비스하는 집행부 △소통하는 집행부 △공부하는 집행부 △연대하는 집행부 △투명하는 집행부 5대상으로 내세우고 위원장 현장순회, 이동정책실, 현장실태조사 등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

KT노동조합 김구현 위원장은 2009년도 노동조합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 "고용안정을 위한 일에는 성심을 다해 협의할 것이나, 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것"을 분명히 했다. 또한 "KT와와의 합병에 따른 통신시장 환경변화와 복수노조 및 전임자임금지금 금지 시행에 따른 대내외 노동환경 변화에도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09년, 그 어느 때보다도 노동계의 혼란이 심화되고 있다. 우후죽순처럼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동계에 대한 정책제고와 배려가 절실하며 내부적으로는 조합원들의 슬기과 조합, 조직적 단결이 필요한 시점이다.

◆ KT노사관계의 과거와 현재

전기통신공사의 발족과 더불어 1982년 1월 설립된 한국통신 노동조합은 유니온샵 제도로 80%가 넘는 조직률을 보이는 국내 최대 노동조합이다. 하지만 당시 노동조건은 열악한 편이었다. 매년 교통사고와 갑질사고, 남중독 등 산재로 인한 사망자가 10명, 부상자가 100명에 이르고 있었다(1995년 기준).

또한, 한국통신 시절의 노사관계는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한국통신노동조합은 1994년 6월 1일 직선제를 통해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면서 노동계의 관심을 받았다. 국내 최대 규모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기간산업을 담당하고 있어서 한국통신노동조합의 변화는 공공부문노동조합대표자회의의 출범과 더불어 노동운동 전반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었다.

1995년 정부는 한국통신노조간부 농성을 진압하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명동성당 안에 공권력을 투입했다. 이후 2000년, 7천여 명의 조합원들이 민영화 반대 및 114서비스 외부위탁 반대 등을 외치며 명동성당에서 총파업을 결의했다. 당시 정부는 또다시 명동성당에 공권력을 투입하여 진압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해고, 징계가 남발하였고 조합원들의 고통은 극에 달했다.

이후 민영화 수순을 밟으며 경영진은 민영화만 되면 모든 것이 나아질 것이라고 공언하며 조합원에게 주식을 넘기기도 했다. 당시 사측은 조직개편이나 구조조정 시기에는 입을 닫고 있다가 막바지에 이르러 선전포고하듯 노동조합에 계획을 알려오고는 했다. 이는 노동조합의 저지투쟁을 불러왔고, 이 과정에서 서로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남기기도 했다. 충분한 설득과정 없이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인력축소 및 임금삭감을 시도하는 것은 노사갈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민영화 이후 노동조합은 먼저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에 기조를 바꾸고 노사관계에 있어서 무엇보다 대화와 교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민영화 이후 지난 7년을 돌아보면 노동조합이 희망하는 노사관계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이익이 많아졌고 주주배당은 늘었지만 직원의 수는 줄고, 노동감도는 배가되고 있다. 주주들에게는 매년 순이익의 50% 이상을 되돌려주는 등 형평성을 잃어버린 분배로 인해 구성원들의 갈등이 적지 않다. 또한 2004년 비영입부서의 상품판매를 금지하는 데 노사가 합의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다.

◆ 통합KT 노사관계의 바람직한 형태

6월 1일 출범하는 통합KT의 바람직한 노사관계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노동조합은 6월 1일 KTF와의 통합호가 출범하면서 KT와 KTF의 임금체계를 비롯한 각종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단체교섭에 앞서, 지난 4월 17일부터 인사 및 보수제도 개선협의회를 가동하고 있다. KT노동조합과 KTF노동조합은 별도의 법인으로 존속하지만, 앞으로 통합KT 조합원들의 고용안정과 복지제도 향상을 위해 많은 협력을 이루어낼 전망이다. 조합간부들간의 대화와 협력이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할 시기이다.

또한 통합KT의 보다 바람직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필요한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진정성과 충실함일 것이다.

우선 노사합의 사항을 준수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노사합의 사항은 법적효력을 지님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이를 묵과하는 경우가 많다. 단체교섭 시기에 집중되는 각종 실무소위원회를 보다 상시적으로 운영해 일상 속에서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을 줄여야 한다.

또한 중앙분부는 지방본부 및 각 지부에서 교육이 유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며, 회사는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노사협력마인드 교육을 적극 시행함으로써 합의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조합원들의 불안감도 차단해야 한다. 조합원들의 터전인 현장은 노사문제가 시작되고,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있는 곳이다. 현장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거나 문제 해결에 소홀할 경우 조직에 대한 불신과 노사갈등이 심화되기 마련이다. 현장 조합원 없이는 노동조합도 회사도 존재할 수 없다. 노동조합뿐 아니라 회사도 현장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창구를 다양하게 마련하고 보장해야 한다.

“노동자가 웃는 세상을 만들자” 5·1 노동절 맞아 여의도공원에서 노동자대회 열려



▲ 민주노총은 5월 1일(금) 사회연대선언을 통해 경제위기의 원인, 기존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반성, 노동계급 내부 격차 극복을 위한 방안, 사회연대 노선과 사회연대 노동 선언의 의미, 사회연대 전략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침 등을 제시했다.

노동조합 중앙상무집행위원 및 수도권·강원·본사지방본부 조합본부들은 노동절을 맞아 5월 1일(금) 오후 3시부터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민주노총 주최 ‘세계노동절 119회 기념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했다. 이번 집회는 1만여 노동자, 시민, 대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MB 정권심판 범국민대회’를 기점으로 열렸다. 특히 민주노총은 올해 처음으로 노동절 대회를 ‘범국민대회’로 확대해 치르기로 하고, 이를 위해 범진보진영과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119주년 세

계노동절 범국민대회 조직위원회’를 구성해 왔다. 이는 노동절대회를 범진보진영이 함께하는 자리로 만들고, 이를 통해 정부정책에 대한 시민사회와 민중진영의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날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은 “조직-미조직, 비정규직-정규직노동자와 사회적 약자, 소외된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사회연대운동에 기반한 노동운동을 만들어 갈 것”을 주장하며 “사회연대노동으로 거듭 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사회연대선언을 통해 △

경제위기의 원인 진단 △기존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반성 △노동계급 내부 격차 극복을 위한 방안 △사회연대 노선과 사회연대 노동 선언의 의미 △사회연대 전략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침 등을 제시했다. 한편 당초 민주노총은 집회신고서를 통해 ‘서울시청 앞 광장 집회 뒤 교보문고 앞까지 행진’을 요구했으나, 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불허, 민주노총은 4월 30일(목) 집회장소를 여의도공원으로 변경했다.

제주 4·3항쟁 정신계승대회 참가 중앙상집·제주조합원 등 50여 명 집회 및 유적지순례 참가



▲ 4월 4일(토) 제주시청 앞에서 ‘비정규직법 저지, MB약법 저지, 제주군사기지 저지,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진상규명, 진영목 민주노총 전 수석부위원장 공안탄압 규탄’을 위한 제주 4·3항쟁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가 개최됐다.

노동조합은 제주 4·3민주항쟁 61주년을 맞아 4월 4일(토)부터 5일(일)까지 제주에서 진행된 전국노동자대회와 4·3항쟁 유적지 순례에 참가했다. 이번 행사에는 중앙본부 장인태 조직처장, 최신철 조직2국장, 제주지방본부 고홍관 위원장을 비롯한 상집 간부들과 조합원 및 IT연맹 간부 등 총 50여 명이 함께 했다. 4일 오후 4시에는 제주시청 앞에서 ‘비정규직법 저지, MB약법 저지, 제주군사기지 저지,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진상규명, 진영목 민주노총 전 수석부위원장 공안탄압 규탄’을 위한 제주 4·3항쟁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가 개최됐다.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를 통해 “제주민주 저항과 학살 현장을 돌아보며 친일파에서부터 미군정을 등에 업고 지금까지도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수구보수세력을 어떻게 끝장낼 것인지 고민했다”며, “MB 정책은 60년 전 미군정과 정권이 제주민중을 학살하던 당시와 본질적으로 다를 게 없다”고 개탄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이명박 정부를 끝장내기 위해 오늘을 기점으로 제주에서 서울에 이르기까지 1단계로 5·1절 투쟁을 합치게 진행하고, 6월 100만 이상이 참여하는 촛불집회를 일으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본 대회를 마치고 제주시청

에서 출발해 오리엔탈호텔을 거쳐 관덕정까지 1시간 동안 거리행진을 펼쳤다. 또한, 이날 대회에서 4·3항쟁 정신을 계승하여 이명박정권 심판투쟁을 벌일 것을 힘차게 결의했다. 한편 참가자들은 전국노동자대회를 마친 뒤 4·3항쟁 유적지 순례에 나섰다. 이들은 4·3평화공원에서 출발해 선술주머니 피신처(목시물 굴)→다랑쉬 마을과 굴, 오름등반→선산 터진목 학살터→선산 서철북별종대 주둔지→선산, 구좌 해안도로 역사유적→너분숭이 학살터와 순이삼촌 문학회 등을 돌아보며, 4·3항쟁 당시 제주민중들의 정신을 되새겼다.

■ 제주 4·3항쟁 정신계승노동자대회 참가기

미완의 보고서로만 남은 제주의 한 맺힌 역사



노동조합 제주지방본부 김석철 제주지부장

지금까지 제주 4·3항쟁은 막연히 군정에 의해 무참히 침탈된 제주도민의 비극이라는 정도만 알고 있던 내게 이번 4·3항쟁 정신계승 노동자대회는 4·3의 원인과 그에 따른 일련의 과정 그리고 그 흔적들을 몸소 돌아봄으로써 실재를 피부로 느끼는 가슴 뭉클한 계기가 되었다.

투쟁사 통해 그날의 함성 다시 느껴

첫날 제주시청 어울림 마당에서 열린 노동자대회에서 제주지역사회의 뜨거운 논란거리인 강정마을 해군기지 설치 반대투쟁을 이끌고 있는 강동규 마을회장의 투쟁사를 들으며 여러 가지 생각

을 할 수 있었다. 한낱 춘부에 지나지 않던 그가 이번 투쟁을 통해서 4·3의 선배들이 왜 항쟁을 하게 되었는지 왜 그토록 비참하게 당해야 했는지를 몸소 느꼈으며, ‘그분들의 항쟁정신을 계승해 끝까지 해군기지 설치 철폐를 위해 투쟁하겠다’는 부분에서는 가슴속 한쪽에서 일어나는 뭉클함을 감출 수가 없었다. 또한 용산 철거민 살인 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 소속 희생자 가족의 연대 투쟁사에서도 힘없는 약자들의 아픔을 엿 보았고, 노동자 농민 등 약자들의 처절한 투쟁보다는 사회적으로 이슈를 이끌어내고 공론화해 대다수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내는 노력들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꼈다.

제주시청 어울림 마당에서 행진을 시작한 노동자대회 참가자들의 거리행진은 투쟁중인 오리엔탈 노조를 방문해 힘찬 격려의 연대투쟁을 펼치고 관덕정 앞까지 이어져, 4·3항쟁의 시발점이 되었던 역사의 현장에서 3·1절 발표사건 그날의 생생한 아픔을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둘째 날은 4·3항쟁 유적지 순례 일정으로 4·3평화공원 참배를 시작으로 선혈 주머니 피신처를 거쳐 다랑쉬 오름과 그 일대의 4·3 학살터를 돌아보며 죄 없

이 쓰러져간 4·3영령들을 가슴으로나마 위로할 수 있었다.

잊혀져 가는 4·3항쟁 정신 안따까워

우직하고 순박한 제주도민들에게 가슴 절절하고 한 맺힌 기억인 4·3은 아직도 미완의 보고서로 남아있다. 그 실체에 대한 정확한 보고서와 아울러 희생자들에 대한 진실된 사과와 보상이 충분치 않은 게 현실이다.

그럼에도 이명박정권은 자신들의 전권과 보수단체들을 이용해 당시 희생된 도민들과 어린이들을 폭도로 규정하는 등 역사 왜곡을 일삼고 있으며, 심지어 4·3위원회 폐지라는 역사차단정책에 혈안이 되어있다.

군단을 거부하고 민주자치를 실현하고자 했던 4·3항쟁 그 정신을 계승하여 MB정권의 역사왜곡과 4·3위원회 폐지 시도를 반드시 저지해야 할 것이다.

이번 4·3항쟁 정신계승 노동자대회를 통해서 느낀 가장 애틋한 부분은 그 실체가 어찌되었든 무고하게 희생된 어린이, 노약자, 부녀자들의 한 맺힌 넋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애도하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 후손들은 아직도 진실되게 가슴으로 느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다.

■ 노동절(Labor Day)의 유래

‘헤이마켓 사건’으로 불 붙은 노동자 단결의 날

노동절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한 휴일로 매년 5월 1일을 가리키며, 메이데이(May Day) 또는 워커스데이(Workers' Day)로 불린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9월 첫째 월요일을, 유럽·중국·러시아 등에서는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8·15광복 이후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했으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1963년 4월 17일 공포, 법률 제132호)’에 따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창설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 대신 근로자의 날로 정해 기념했다. 이후 1994년부터 다시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노동절의 유래는 과거 미국의 노동운동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미

국의 인구는 5천만명, 그리고 890만 명의 농민, 850만명의 노동자가 있었다. 당시 미국은 자본주의 발달과 함께 성장한 독점기업들이 국가 권력과 결탁하여 노동자들을 착취했다. 이에 맞서 1866년 전국노동조합이 결성되었으며, 1869년 노동기사단, 미국노동총연맹 등이 결성되는데 이들은 노동시간 단축을 최대 과제로 설정했다. 그리고 8시간 노동제 입법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러한 요구는 곧바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그리고 1884년부터 노동단체들로부터 1886년 5월 1일을 기해 8시간 노동제를 요구하는 파업이 결의되기 시작했다. 이 파업에서 경찰의 발포로 노동자 6명이 사망했고 다음날 이에 격

분한 노동자 30만 명이 경찰의 만행을 규탄하기 위해 헤이마켓 광장에서 집회를 열었다. 하지만 시위 중 갑자기 폭탄이 터졌고 집회를 주도한 노동운동가 8명이 폭동죄로 체포되어 재판에서 5명은 사형, 3명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프랑스혁명 100주년을 기념해 1889년 7월 파리에서 열린 제2인터내셔널 설립대회에서는 미국 노동자의 8시간 노동을 위한 상황을 보고받고, 1890년 5월 1일을 ‘노동자 단결의 날’로 정해 8시간 노동쟁취를 위한 세계적인 시위를 결의했다. 이후 세계 각국에서 이날을 노동자의 연대와 단결을 위한 국제적 기념일로 정하고 기념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지급 일정

- 노동조합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기금항목별 본사 마감일자에 혼란이 있어 노사협의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아래와 같이 지급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 ▶ **대학교 장학금, 의료비**
 - 매월 5일 본사발송분(우체국소인 기준)까지 당월 급여일 지급
- ▶ **경조사비, 재난구호금, 교육보조비(유아·초등)**
 - 매월 15일까지 승인분을 당월급여일에 지급
- ▶ **주택자금 대부일정**
 1. 신청 및 접수마감 : 출수월 25일
 2. 신청발표 : 출수월 말일
 3. 대부금 지급 : 짝수월 급여일
- ▶ **생활안정자금 대부일정**
 1. 신청 및 접수마감 : 짝수월 5일
 2. 신청발표 : 짝수월 15일
 3. 대부금 지급 : 짝수월 급여일
- ▶ **기금신청기한 -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지급계좌 및 지급일 - 별도계좌(매월 급여일)**

수련관 프로세스 개선 실행계획

- ▶ **수련관 입소 기준 강화**
 1. 객실별 기준인원 초과시 별도요금 부과 : 1박당 5천원/인
 2. 외부인 이용시 요금징수
 - 5인 : 30,000원 / 7인 : 50,000원 / 10인 : 70,000원
 - 입소유형에 “외부교육입소” 신설
 3. 사원 입소 횟수 제한 : 1인당 연간 3회(휴양소, 콘도 포함)
 - 최근 1년간 3회 이용시 “외부교육입소” 적용
 4. 배정승인 단계 축소
 - 배정 : 본사에서 지사단위까지 일괄 배정(현원기준)
- ▶ **현장 추천사원 수련관 이용 우대**
 1. 대상인원 : 분기당 300명(2/4분기부터 시행)
 - 마케팅단 200명, 네트워크단 50명, 법인사업단 25명, 본사 현업 25명
 2. 배정자 추천 : 현장기관 추천 사원(노사협의)
 - 수련관 이용실적, 회사 기여도 등 고려
 - 이용방법 : 입소장소/기간 3순위 접수 후, 최대한 희망지 반영
- ▶ **계열사 사원 수련관 이용 확대**
 1. KTF 사원 통합 전 우선 이용
 2. 계열사 사원 이용 확대 - 객실배정 : 총 객실의 5%

연금저축 본인부담액 변경 추진

- ▶ **연금저축 가입결과**
 1. 2006년 임금협상 결과에 따라 2007년 1월부터 지원
 2. 가입시 중점 고려 및 추진사항
 - 금융사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업무부담을 위하여 모 집인 가입 금지
 - 가입특정 부여 : 보험료 할인, 대출이자율 인하 등
 - 최후가입 이후 계약사항 변경불가(본인부담액 포함)
 3. 최근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납입금액 변경의 필요성
- ▶ **변경사항**
 1. 본인부담액 금액 조정
 - 은행/증권사 : 가능
 - 보험사 : 삼성생명/금호생명/현대해상화재(증권), 교보생명(감액), 대한생명/신한생명(증권), 동부화재(2009.5.16까지 한시적)
 - ※ 금융사이전 불가 : 금융사간 이전 경쟁으로 최초 가입시 우려했던 업무방해, 회사 이미지 추락 등 발생 방지
- ▶ **변경프로세스**
 1. 변경신청(방문/전화), 매월 1일~10일 이내
 2. 변경결과 팩스송부 (031-398-7072)
 3. 입금액 변경 명단통보
 - ※ 본인 직접변경 사유 : 금액변경시 본인확인 필요
 - 증권사 : 연간 납입한도 초과시 변경불가로 한도 재설정
 - 감액사 : 가입특정(보험료 할인, 대출이자율)변경으로 불이익 가능

2009년도 건강검진 시행 관련 노사합의

- 노동조합과 회사는 2009년도 사원 및 배우자 건강검진에 관하여 합의하고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 ▶ **사원 건강검진**
 - 만40세 이상(1969.12.31 이전 출생자) : 20만원
 - 만40세 미만(1970.01.01 이후 출생자) : 15만원
- ▶ **배우자 건강검진** : 12만원
- ▶ **검진항목 필수사항**
 - 위암 (40세 이상 남녀)
 - 유방암 (40세 이상 여성)
 - 대장암 (50세 이상 남녀)
 - 자궁경부암 (30세 이상 여성)
- ▶ **추진일정** : 2009년 5월 ~ 10월 말
- ▶ **검진기관 선정** : 지사단위 자율
 - ※ 퇴직사원도 재직자와 동일한 단가로 수검가능(단, 본인부담)
- ▶ 자세한 내용은 www.kttu.or.kr 자료실/문서정책란을 참조해 주세요.

김구현 위원장, 용문산중계소 찾아 조합원 격려

세 번째 현장순회지로 강북지방본부 관내 현장 찾아



▲ "현장과 함께하는 노동조합을 만들겠습니다" 용문산 중계소를 찾은 김구현 위원장(왼쪽에서 두번째).

김구현 위원장은 4월 22일(수) 강북지방본부에서 세 번째 현장순회를 가졌다. 김 위원장은 강북지방본부 김태호 위원장 등 조합간부들과 함께 용문산중계소, 동두천지부, 전곡지부 등을 순회하며 강북지방본부 소속 조합원들을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고용안정을 위한 힘찬 각오를 밝혔다.

김구현 위원장 KTFT·KT파워텔 노동조합 정기대의원대회 참석

"KT그룹노동조합협의회 연대의 힘으로 고용안정 쟁취하자"

김구현 위원장은 4월 15일(수) KTFT노동조합 정기대의원대회, 17일(금) KT파워텔노동조합 창립20주년 기념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해, 연대의 힘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KTFT노동조합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연대사를 통해 안호경 위원장님과 노동조합 간부들께 축하인사를 전하고 "올해 초 그룹전체에 불어온 변화의 분위기로 인해 KT그룹 조합원 모두가 동요한 것이 사실이나, KT를 비롯한 그룹노동조합협의회 전체 조합원들의 고용을 최우선으로 결의하고,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는 모든 유언비어를 정면으로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의원대회가 KT그룹 대표 단발기 제조사인 KTFT 조합원들의 긍지를 재확인하고, 더욱 강한 힘으로 2009년 투쟁하고 쟁취하기 위한 다짐의 장이 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17일 KT파워텔노동조합 창립20주년 및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한 김구현 위원장은 박홍식 위원장과 조합간부들께 창립20주년 및 정기대의원대회를 축하했다. 김 위원장은 "KT파워텔 노동조합 창립 20주년은 매우 뜻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국내 무선주파수공용통신 시장을 이끌어 온 KT파워텔 조합원 여러분의 20년은 외롭고 힘든 여정이었지만, 그 고된 길이 있었기에 국내 무선통신기술이 세계시장에 우뚝 설 수 있는 토대를 마련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구현 위원장은 29일(수)~30일(목) 거제도에서 열린 'KT노동조합 동우회 2009년 정기총회'에 참석해 "선배 조합간부님들의 지혜와 사명감을 이어받아 자랑스러운 노동조합의 역사를 이어갈 것"을 약속했다.

15~17일 본사지방본부서 이동정책실 운영

중앙상집, 대구·부산지역 조합원과 함께 땀 흘리며 고충 접수



▲ 중앙상집들은 16일(목) 아침 8시에 물류센터로 출근해 박중훈 지부장 및 조합원들과 아침인사를 나눈 뒤 곧바로 현장으로 이동, 간단한 안전교육과 작업요령을 숙지하고 작업에 들어갔다.

노동조합은 4월 15일(수)부터 17일(금)까지 대구와 부산지역을 돌며 3차 이동정책실을 운영했다. 15일과 16일에는 본사지방본부 산하 대구고객센터와 대구물류센터를 방문했고, 16일 오후에는 부산으로 이동해 17일까지 활동했다. 이동정책실은 '현장중심의 활동'이라는 기조에 맞게 대구물류센터를 찾아 현장조합원들과 함께 작업을 진행했다. 물류센터는 예전부터 '본사 내 3D'라고 불릴 정도로 힘든 작업이 많은 곳이었으나 요즘 들어서는 기계화가 많이 진행돼 훨씬 나아진 편이었다. 중앙상집들은 16일 아침 8시에 물류센터로 출

근해 박중훈 지부장 및 조합원들과 아침인사를 나눈 뒤 곧바로 현장으로 이동, 간단한 안전교육과 작업요령을 숙지하고 작업에 들어갔다. 첫 작업은 동케이블을 벗기고 주면에 맞게 잘라 현장으로 보내는 작업이었다. 나름의 요령을 숙지하고 작업에 들어갔으나 익숙지 않은 탓인지 작업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50P 동케이블 2,000미터 짜리를 벗겨 작업대에 옮기고, 주면에 맞게 500미터씩 잘라 배송하는 데 대략 25분 정도가 걸렸으나 다음 작업부터는 요령이 붙어 시간이 많이 단축됐다. 광케이블은 1000미터를 감는데만 약 40분 정도가 걸렸다. 이어 불

용케이블을 2미터 남짓한 크기로 잘라내는 작업을 진행했다. 손가락 굵기만한 케이블 작업부터 팔뚝만한 케이블까지 종류가 다양했다. 물류센터 조합원들은 "지금은 괜찮지만 저녁쯤 되면 온 몸이 빠근할 것"이라며 "쉬엄쉬엄 하라"고 다독였으나 중앙상집들은 요령이 붙은 탓인지 작업속도를 늦추지 않았다. 2박 3일에 불과한 시간이었지만 중앙상집들은 평소에도 자주 찾지 못하던 현장을 찾아 조합원들과 함께 일하고 땀 흘리는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중앙상집 출근선전전 실시

본사지방본부와 함께 10-3호 노보 배포



노동조합은 지난 4월 7일(화) 아침 본사 사옥에서 출근선전전을 진행하고 조합원들에게 노보 10-3호를 배포했다. 이날 출근선전전에는 중앙상집집행위원을 비롯한 본사지방본부 상집간부들이 함께 했으며 아침 7시 30분부터 1시간여 가장 진행했다. 노동조합은 10대 집행부 출범 이후 조합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매달 노보 배포 및 출근선전전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제4차 전국지방본부 위원장회의 개최

각종 현안논의 및 신설·사고지부 선거일 확정

노동조합은 4월 2일(목) 오전 10시 중앙본부 회의실에서 제4차 전국지방본부위원장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부승격 및 신설지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각종 규정 개정안 △기타 현안사항 등을 논의하고 신설·사고지부 대표자 선출선거 일정을 확정했다. 선거는 4월 23일(목)로 결정되어 예정대로 치러졌다.

4월 1일 중앙본부 월례회의 실시

실·처별 3월 활동보고 및 4월 사업계획 토론

노동조합은 4월 1일(수) 오전 9시 중앙본부 회의실에서 4월 중앙상집집행위원 전원회의를 갖고 3월 활동실적 및 4월 사업계획을 점검, 논의했다. 이날 김구현 위원장은 "모두가 노력한 덕분에 2009년 정기전국대의원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며,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된 사업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중앙상집 모두가 4월에도 열심히 뛰어달라"고 당부했다. 또 김 위원장은 2009년 임금 및 단체협상과 관련해 "상반기 중에 교섭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정책실을 중심으로 모든 실·처가 만반의 준비를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날 회의에서는 각 실·처별 활동보고 및 사업계획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현장사업부서 직원들의 경우 야간작업을 하고도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또한 10대 집행부 공약사항인 지부 승격 및 신설지부와 관련하여서는 4월 안에 마무리하도록 계획했다. 이동정책실 운영과 관련하여도 간단한 평가가 진행됐다. 2월 강원지역과 3월 충북지역에서 이동정책실을 운영한 결과, 조합원들의 호응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이동정책실은 초반의 어색한 분위기는 달리 시간이 갈수록 허심탄회한 소통의 자리로 정착되고 있어, 10대 집행부의 주요사업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제4회 UNI ARPO P&MS 포럼 열려

노동조합과 관리감독·전문기술직 연대방안 등 논의



▲ KT노동조합에서는 중앙본부 박경윤 재정책장, 전형집 정책1국장이 IT연맹 박홍식 위원장, 김건태 KT파워텔노동조합 사무국장 등과 함께 참석했다. 박홍식 IT연맹 위원장은 이번 포럼 세션3 '관리감독·전문기술직에 있어 양질의 일자리와 일과 생활의 균형'에서 '한국 정보통신부문 양질의 일자리'에 대해 발표했다.

지난 4월 22일(수)에서 23일(목)까지 'UNI ARPO P&MS(유니 아태지역 관리감독직 전문기술직) 포럼'이 일본 도쿄에서 개최됐다. UNI Apro와 NWJ(NTT노동조합)이 주최한 이번 포럼에는 UNI 세계노동조합에 가맹중인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 노조 35개 지부에서 참가한 노동조합 간부 140여명이 참가했다. KT노동조합에서는 중앙본부 박경윤 재정책장, 전형집 정책1국장이 IT연맹 박홍식 위원장, 김건태 KT파워텔노동조합 사

무국장 등과 함께 참석했다. 박홍식 IT연맹 위원장은 이번 포럼 세션3 '관리감독·전문기술직(이하 P&MS)에 있어 양질의 일자리와 일과 생활의 균형'에서 '한국 정보통신부문 양질의 일자리'에 대해 발표했다. 올해로 4번째로 열린 이번 포럼의 화두는 P&MS직이 '노동조합 활동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였다. 이번 포럼의 주 목적은 △노동조합이 P&MS 직(관리감독직 및 전문기술직)노동자와 연대하고 △조직원화를 위한 혁신적인 방안을 창출하며 △P&MS직 노동자가 양질의 일자리와 일과 생활의 균형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을 짜고 그 지원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었다. 세션 3에서는 박홍식 IT연맹 위원장의 발표와 함께, 일본 정보노련 정책국 나가자와 신야씨, 일본 전국섬유화학식품유통서비스일반노동조합 정책부장 요이치 치카미씨, 싱가포르 상업유니온 특별대표 플로렌스 티 리 풍 씨, 가와하시 마나부 일본 서비스 유통연맹 정책국 부장 등의 발표가 이어졌다. 한편, 시노다 다케시 일본 리츠메이칸대학 사회학과 교수는 경제격차가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질 좋은 고용을 확보해야 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기조연설에 나서 눈길을 모았다.

제6회 위원장기 전국조합간부 축구대회 실시

노동조합은 5월 7일(목)부터 8일(금)까지 1박2일 동안 조합간부들을 대상으로 '2009년 제6회 위원장기 전국조합간부 축구대회'를 실시합니다. 일상조합활동 틈에서 벗어나 대자연 안에서 활발한 논의를 통해 노동조합의 발전적 미래를 설계하고, 재충전과 사기진작으로 단결의 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 ▶ 기간: 2009년 5월 7일(목)~8일(금)
- ▶ 장소: 전남 구례 섬진강변 축구장
- ▶ 대상: 전국조합간부 및 행사진행요원 등
- ▶ 경기종목: 축구, 릴레이, 계주, 줄다리기 등